

人文論叢

83권 1호

2026년 2월

서평

www.kci.go.kr

‘공화의 지향’과 ‘제국의 관성’

이원준*

[서평] 유용태(2025), 『제국공화주의:
현대중국의 자기인식과 역사서사』,
한울아카데미, 400쪽

1. 부상하는 중국과 ‘제국’의 관성

21세기에 들어와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급상승하면서, 그와 함께 중국의 부상이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어났다. 한편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이를 경계하는 관점이 확산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기존의 미국 중심적 패권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평화적 국제질서를 추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출하였다. 본서에서 저자는 이를 각각 ‘패도중국론’(霸道中國論)과 ‘왕도중국론’(王道中國論)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두 주장은 모두 일정한 선입견과 이해관계가 투영된 관점이며, 중국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관점의 굴레에서 벗어나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부상하는 중국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접국으로서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작업이 더욱 불가결하다. 본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중국 현대사를 연구해온 저자가 현대중국 100년의 역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내놓은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1세기의 부상하는 중국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역사적 맥락과 유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부교수

산을 짚어보는 학술적 작업은 이미 국내 학계에서 수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그 주요 성과를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본서의 내용이 기존의 학술적 성과와 어떤 점에서 연속되어 있고, 또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어 있는지 가능해보고자 한다.

이 문제를 국내 학계에서 먼저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은 전인갑(2016)이다.¹ 전인갑은 199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과 함께 나타난 중국의 ‘제국화’ 경향과 ‘지식 패러다임의 반전’, 즉 ‘문화보수주의’ 강화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역사적 배경을 탐구하였다. 전인갑(2016)은 역사 속 중화제국의 핵심적 특징을 ‘보편가치에 기초한 사회질서 및 통치체제 구축’이라는 ‘문화주의’로 규정하면서, 문명의 보편성을 근간으로 작동하는 중국 중심의 천하질서를 건설해온 ‘중화제국의 유산’을 강조하였다.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 모두 정치적 통합과 이념적 통합을 결합한 ‘대일통’(大一統)의 구현을 추구하였고, ‘국민국가’는 결국 이를 위한 외피로 차용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중화제국의 이러한 유산은 통치질서와 이념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전통 시대 사회경제적 관행의 지속을 통하여 아래로부터도 뒷받침되었고, 이는 곧 ‘중국적 근대’로 발현되었다고 보았다.

제국으로서의 전통적 유산에 주목한 전인갑(2016)과 달리, 차태근(2021)은 20세기 초에 수용된 서구 제국주의 담론의 영향을 강조하였다.² 현대 중국의 세계 인식은 ‘타자’로서 제국주의를 상대하며 형성되었고, 그런 점에서 제국주의가 주조한 언어체계를 통해 세계를 인식함으로써 제국주의 세계관의 인식 구조를 내면화했다는 것이다. 이는 백영서(2022)가 지적한 ‘이중적 주변의 시각’과도 상통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³ 물론, 차태근(2021)도 전통적 중화사상의 영향을 인정하였다. 전통적 중화의식과 제국주의 세

1 전인갑(2016), 『현대중국의 제국몽: 중화의 재보편화 100년의 실험』, 학고방.

2 차태근(2021), 『제국주의 담론과 동아시아 근대성: 현대 중국의 정치적 무의식을 찾아서』, 소명출판.

3 백영서(2022), 『동아시아담론의 계보와 미래: 대안체제의 길』, 나남, pp. 209-215.

계관은 세계 인식에서 상통하는 측면이 있고, 현대중국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전통적 중화의식이 제국주의를 만나며 근대적인 형태로 변화한 것이 ‘현대 중국의 정치적 무의식’에 내재된 ‘제국성’의 토대를 이루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최근에 발행된 이종민(2025)은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 관점을 응용하여 ‘중화민족’과 현대중국을 ‘상상의 제국’으로 규정하였다.⁴ 앤더슨의 관점에서 볼 때, 전통 제국에서 분리되어 하나의 민족국가로 탄생한 것을 ‘상상의 공동체’라 한다면, 현대중국은 청 제국의 판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의 일체화한 통일국가로 만들려는 ‘상상의 제국’이라는 것이다. 현대중국은 한족(漢族)으로 구성된 ‘소민족’(小民族) 국가의 연속이 아닌, ‘대민족’(大民族)의 제국을 하나의 일체화한 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는 점에서, ‘제국’과 ‘민족국가’의 이분법적 관점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제국’이면서 동시에 ‘민족국가’를 지향하는 현대중국의 간극을 메우기 위하여 량치차오(梁啟超)를 필두로 한 근대 지식인들은 중국사를 통일국가로의 필연적 진화 과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 중국공산당의 역사공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서 역시 ‘제국공화주의’를 키워드로 삼아 현대중국에 내재된 ‘제국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위에서 소개한 국내 학계의 기존 연구와 맥락이 닿아 있다. 다만, 전인갑(2016)과 차태근(2021)이 현대중국의 ‘제국성’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규명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본서는 그러한 ‘제국성’이 중국현대사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드러내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종민(2025)이 ‘상상의 제국’에 내재한 ‘제국성’을 지적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20세기 초에 등장한 미래 중국의 상상과 21세기 중국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제국성’의 역사적 발현 양상에 주목하는 본서는 그 결을 달리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서는 현

4 이종민(2025), 『상상의 제국: 현대 중국에 대한 문명사적 성찰』, 역락.

대중국의 ‘제국성’을 둘러싼 국내 학계의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면서, 현대중국에 대한 비판적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한다.

2. 현대중국 100년의 ‘제국공화주의’

본서의 핵심 개념인 ‘제국공화주의’는 1911년 신해혁명 당시에 장친(張勳)이 새로운 국가에서 채택할 정체(政體)로 제안한 모델에서 착안한 개념이다. 장친은 청 제국의 판도를 보존하기 위하여 청 황제를 종교적 권위만 부여한 ‘대성황’(大聖皇)으로 존치시키면서, 정치적 실권은 공화국의 대통령에게 부여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한족 생활권 바깥에 있는 만(滿)·몽(蒙)·회(回)·장(藏) 지역의 고유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동의를 전제로 함께 공화국을 건설한다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는 ‘제국’과 ‘공화’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온 학계의 기존 논의를 더 확장할 수 있는 역사적 사례이기도 하며, 아울러 공화제의 틀 안에서 제국의 관성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제국성’과 ‘공화성’의 공존이라는 현대중국의 특성을 설명하기에도 유용한 개념이다. 저자는 ‘제국공화주의’의 관점을 통하여, ‘공화성’을 표방해온 현대중국 100년의 역사에 내재한 ‘제국성’을 도출하는 것에 주력하였다.⁵

먼저, 본서의 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제국’이 내포하는 중층적 함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중국’과 ‘제국’을 각각 3개의 하위 개념으로 구분한다. ‘중국1’은 진(秦)·한(漢) 이래 형성되어 지속된 한족의 영역을 지칭하며, 대체로 군현제(郡縣制)가 시행된 만리장성 이남의 지역을 가리킨다. ‘중국2’는 ‘중국1’과 그 바깥의 만주·몽골·위구르·티베트

5 본서의 요지를 저자가 직접 설명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다음의 글을 참고할 것. 유용태 (2025), 「양극단의 중국인식, 평형추는 없을까?」, 대학지성 In&Out 웹사이트, 대학지성 In&Out, 2025. 12. 22.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20>

지역을 모두 아우르는 범위를 뜻하는데, 청 제국의 판도에 해당하는 이 영역을 모두 ‘중국’이라는 명칭으로 개념화한 것은 대체로 18세기 후반 이후였다. ‘중국3’는 ‘중국2’ 바깥의 옛 조공국의 영역을 포괄하는 다분히 ‘상상된 중국’을 가리킨다. 또한, ‘제국1’이 황제의 유무와 무관하게 문화적으로나 종족적으로 이질적인 영역을 국가 시스템으로 위계적으로 지배하는 지배체제를 지칭한다면, ‘제국2’는 ‘제국1’의 영역을 넘어 대외적으로 자국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인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정치체를 의미한다. ‘제국3’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과 같은 ‘비공식적 제국’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본서는 주로 ‘중국1’과 ‘중국2’, ‘제국1’과 ‘제국2’의 개념을 활용하여, 현대중국이 ‘중국2’의 영토 보전을 위하여 ‘제국1’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왔으며, 때로는 ‘중국3’으로의 영향력 확장을 통해 ‘제국2’의 위상을 추구하고 왔다는 점을 드러냈다. ‘공화’와 ‘반제국주의’를 표방하며 출발한 현대중국이 실제로는 ‘공화성’과 함께 ‘제국성’을 추구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양자의 중첩과 모순을 노정해왔음을 밝히는 것이 본서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서는 다음과 같이 3부로 본론을 구성하였다. 먼저, 제1부(‘공화만세와 제국관성: 제국공화주의’)는 중국의 현대사가 ‘공화’를 표방하며 시작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이어서, ‘제국성’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 출발한 현대중국의 공화주의에 내재된 한계를 고찰하는 렌즈로서 ‘제국공화주의’에 대한 분석으로 넘어간다. 이를 통하여 ‘제국공화주의’에 내포된 ‘제국성’과 ‘공화성’을 분석한 후, ‘공화중국’의 ‘제국성’이 ‘대중국론’(大中國論)과 ‘중화민족론’으로 나타났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제1부의 논의는 주로 현대중국이 ‘중국2’에 대한 ‘제국1’의 위상을 추구해왔음을 확인하는 데 집중한다. 현대중국의 공간적 범위를 현재의 국경과 대략 일치하는 ‘중국2’라고 본다면, ‘제국공화주의’의 내향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제2부(‘공화중국의 약진: 반제연대와 세계 속의 중국’)는 현대중국의 대외팽

창 시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로서 ‘정의전쟁론’(正義戰爭論)을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정의전쟁론은 현실적으로는 일본과 미국 등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에 대한 저항의 담론으로 작용했지만, 한국전쟁처럼 ‘반제국주의 투쟁’의 전선이 중국 바깥에서 형성될 경우에는 중국의 대외 영향력 확대와 맞물려 한층 더 복잡한 의미를 갖게 된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삼민주의 인터내셔널’과 ‘동방정보국’ 문제를 통하여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에 의한 대외 팽창 시도를 본격적으로 분석한다. 양자는 모두 현실화하지는 못했지만, 대립 관계에 있었던 두 혁명당이 각각 삼민주의와 마오쩌둥사상을 핵심 이데올로기로 삼아 세계혁명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혁명중국’의 ‘제국성’을 지적하는 부분으로서, 제1부가 ‘제국공화주의’의 내향적 측면을 다루었다면, 제2부는 그 외향적 측면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제3부(“역사서사 속의 제국성과 공화성”)는 20세기 중국의 통사 서술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비교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통시대 ‘중화제국’의 대외전쟁에 대한 서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전후 시기에는 ‘중화제국’의 대외전쟁에 대한 서사가 ‘정벌론’(征伐論)과 ‘무용론’(無用論), ‘침략론’ 등 비교적 다양한 관점에서 형성되었지만, 1960년대에 이르러 서사의 다양성과 자성(自省)의 시각이 줄어들었음이 확인된다. 이후 개혁·개방 시기에 들어와 전통의 재평가를 통한 ‘복고적 혁신’이 강화되며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기초한 역사 서사가 부각되었으며, 최근의 시진핑 시기에 이르러서는 중국적 개념서사를 도입함으로써 ‘중국적 특색을 갖춘 세계사’ 서술을 시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상과 같은 제3부의 논의는 제1부와 제2부에서 확인된 현대중국의 ‘제국성’이 중국의 자기인식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본서의 논의를 통하여 중국의 역사 인식에서도 ‘제국성’의 측면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종장(“중국 예외주의를 넘어”)에서 ‘자칭 예외주의’로

서의 ‘왕도중국론’과 ‘타칭 예외주의’로서의 ‘패도중국론’을 모두 극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본문에서 살펴본 현대중국의 ‘제국성’은 ‘왕도중국론’의 허구성을 입증하며, 미국과 프랑스 등 ‘제국적 공화국’의 사례는 ‘패도중국론’의 편향성을 반증한다. 자칭이든 타칭이든, ‘중국 예외주의’를 넘어서는 것이 부상하는 중국의 실상에 한층 더 객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제국성’을 제어하고 ‘공화성’을 고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아시아·아프리카 중소국가들이 평화공존의 원칙 아래 연대한 1955년의 반동회의를 지목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3. ‘제국성’ 극복의 딜레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서는 현대중국 100년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제국성’을 크게 ‘내향적 측면’(제1부)과 ‘외향적 측면’(제2부), ‘자기인식’(제3부) 등 세 가지 방면에서 고찰한다. 이하에서는 ‘제국공화주의’의 내향적 측면과 외향적 측면에 대한 필자의 단견을 덧붙임으로써 본서에 대한 논평을 같음하고자 한다.

3.1. ‘제국공화주의’의 내향적 측면

‘중국’의 공간적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중국’의 범위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었고,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변해기 때문이다.⁶ 무엇보다, ‘중국’이 오늘날처럼 하나의 국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립되기 전까지는 중원 왕조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사용되거나, 중원

6 ‘중국’의 공간적·문화적 범위가 시기별로 변화해 온 양상과 그 함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거자오광(2019), 김효민·송정화·정유선·최수경 옮김, 『전통시기 중국의 안과 밖: ‘중국’과 ‘주변’ 개념의 재인식』, 소명출판.

지역의 농경·유교 문화를 공유하는 ‘화하문화’(華夏文化) 공동체를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내포는 더욱 복잡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⁷ 만주·내몽골·위구르·티베트 등지는 명(明) 시기까지만 해도 ‘중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청 후기부터 ‘중국’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현재도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현대중국은 일정 부분 태생적으로 제국성을 떨 수밖에 없다. 여타 제국과 달리 중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복수의 민족국가로 해체되지 않았고, 제국이 기존의 영역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국가로 전환되는 경로를 걸었기 때문이다. 황제제도의 유무와 무관하게 복수의 이질적인 종족적·문화적·사회적 영역을 위계적으로 통치하는 정치체를 ‘제국’이라 규정한다면, 청(淸) 제국의 판도 대부분을 통합한 현대중국은 이른바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을 단행하지 않는 이상, ‘제국’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 것이다.

본서는 현대중국의 이러한 ‘제국성’을 약화하고 ‘공화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역사적 모델로서, 장친이 제국공화주의론에서 언급한 조건, 즉 청 제국의 영토를 유지한 채 공화국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만·몽·회·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만·몽·회·장의 동의를 중시한 장친을 “보기 드문 공화주의자”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⁸ 그러나 신해혁명 이후 중화민국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동의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고, 현대중국은 청 제국의 영역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승계’하였다. 청의 몰락 이후 몽·회·장 일대의 분리독립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끝내 중국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정치적·군사적 통합을 거치면서 ‘제국’의 영역은 대부분 유지되었다.

7 거젠슉(2022), 김영문 옮김, 『불변과 만변: 거젠슉 중국사를 말하다』, 역사산책, pp. 10-17.

8 유용태(2025), pp. 86-87.

현대중국의 이와 같은 ‘제국1’로서의 성격에 대한 비판은 중국 바깥에서는 대체로 공감을 얻고 있다. 필자 또한 깊이 공감하는 바이다. 다만, 현대중국의 이러한 태생적인 ‘제국성’을 제어하고 ‘공화성’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소수민족’의 의사결정권을 최대화하는 것이 ‘공화성’의 발현일 터인데, 과연 현실적으로 현대중국이 그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이 아니더라도, 그 어느 국가가 과연 자국 면적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부분의 분리독립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저자도 분리독립이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점은 지적하고 있으나, 동시에 분리독립의 요구가 있다는 것 자체를 ‘제국성’의 근거로 삼고 있으므로(124쪽), 논리적으로 중국은 분리독립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국’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물론, 본서는 현대중국의 역사에 내재한 ‘제국성’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 문제는 본서의 논의 범위 밖에 있다. 단지, 본서에서 드러낸 현대중국의 ‘제국1’로서의 ‘제국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에 대하여 향후 학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언급해두는 바이다.

3.2. ‘제국공화주의’의 외향적 측면

제2부에서 다루고 있는 ‘삼민주의 인터내셔널’과 ‘동방정보국’ 등의 주제는 공통적으로 현대중국의 대외 팽창 의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와 관련된 것들이다. ‘중국2’의 범위를 초월하여 정치적·외교적 영향력의 확대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이는 ‘제국공화주의’의 외향적 측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G2’로 부상한 이후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나날이 강화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특히 인접 국가로서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의 상황에서, 현대중국의 외향적 ‘제국공화주의’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본서는 중국국민당 내부에서 제기되었던 ‘삼민주의 인터내셔널’ 주장

을 분석하여, 1949년 이전에도 현대중국이 ‘삼민주의 세계혁명’을 지도함으로써 세계혁명을 이끄는 중심으로 거듭나겠다는 꿈을 꾸었음을 지적하였다. ‘삼민주의 인터내셔널’ 구상은 끝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난징국민정부 초기의 당 공식 문서에 수용되었고, 일부 고위 지도자들이 그 취지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중국국민당의 세계인식과 자기인식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본서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국민정부가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을 지원하면서 전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은 장제스와 중국국민당의 세계인식에 남아있는 중화주의의 요소를 여실히 드러낸다.⁹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의 ‘동방정보국’ 설립 시도도 마찬가지이다. 유럽의 코민포름과 유사한 아시아의 코민포름을 결성하고 그 중심 국가가 되고자 한 마오쩌둥의 구상은 비록 스탈린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한국전쟁 이후로 중국공산당은 아시아 혁명운동에서 실질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¹⁰ 1950년대 중반 이후로 중국공산당은 ‘중간지대론’(中間地帶論)을 변주하며 ‘미국제국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사이에 있는 국가들과의 연계를 확대하였고,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한 1960년대 초부터는 미국과 소련을 모두 ‘제국주의’로 규정하며,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에 저항하는 세계적 통일전선의 중심을 자처하였다. 그리고 ‘세계혁명의 중심’이라는 중국의 자기인식은 마침내 문화대혁명 시기에 이르러 극단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평화와 발전’의 논리에 따라 세계를 양대 진영으로 구분하여 사고하는 세계인식을 극복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더욱 확대되었고, 도광양晦(韜光養晦)의 단계를

9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 배경한(2024), 『20세기 한중관계사 연구: 20세기 전반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중관계』, 일조각.

10 Zhihua Shen and Yafeng Xia (2014), "Leadership transfer in the Asian revolution: Mao Zedong and the Asian Cominform", *Cold War History* 14(2).

지난 현재의 중국은 그 영향력을 곳곳에 투사하고 있다.¹¹

이처럼, 현대중국이 그 영향력을 ‘중국2’의 범위 너머로 확장하려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듯하다. 다만, 이를 ‘제국성’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제국성’의 핵심 요소는 이질적 영역과의 관계 설정에서의 ‘위계성’에 있으며, 현대 중국의 세계인식과 대외정책의 특징을 ‘제국성’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상대국의 관계에서의 위계성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마오쩌둥 이후 현대중국의 세계인식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중국을 세계의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지만,¹²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것과, 중국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세계 각지의 혁명운동을 지원하거나 개발도상국을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꼭 지원 대상이 되는 혁명집단 또는 국가를 위계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대중국이 ‘중국3’의 영역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위계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시행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례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면, ‘제국2’ 또는 ‘제국3’으로서의 현대중국을 더욱 분명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거자오광(2019), 김효민·송정화·정유선·최수경 옮김, 『전통시기 중국의 안과 밖: ‘중국’과 ‘주변’ 개념의 재인식』, 소명출판.

11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의 세계인식 변화의 추이와 그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이원준(2021), 「마오쩌둥의 세계 인식과 ‘中間地帶論’의 變奏(1946~76)」, 『중국근현대사연구』 90; 이원준(2022), 「중국공산당 100년의 세계인식과 외교 노선 변천사 試論」, 『중국근현대사연구』 93.

12 이원준(2022), p. 265.

- 거젠승(2022), 김영문 옮김, 『불변과 만변: 거젠승 중국사를 말하다』, 역사산책.
- 배경한(2024), 『20세기 한중관계사 연구: 20세기 전반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중관계』, 일조각.
- 백영서(2022), 『동아시아담론의 계보와 미래: 대안체제의 길』, 나남.
- 이종민(2025), 『상상의 제국: 현대 중국에 대한 문명사적 성찰』, 역락.
- 전인갑(2016), 『현대중국의 제국몽: 중화의 재보편화 100년의 실험』, 학고방.
- 차태근(2021), 『제국주의 담론과 동아시아 근대성: 현대 중국의 정치적 무의식을 찾아서』, 소명출판.
- 유용태(2025), 「양극단의 중국인식, 평형추는 없을까?」, 대학지성 In&Out 웹사이트, 대학지성 In&Out, 2025. 12. 22,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20>
- 이원준(2021), 「마오쩌둥의 세계 인식과 ‘中間地帶論’의 變奏(1946~76)」, 『중국근현대사 연구』 90.
- 이원준(2022), 「중국공산당 100년의 세계인식과 외교 노선 변천사 試論」, 『중국근현대사 연구』 93.
- Zhihua Shen and Yafeng Xia(2014), “Leadership transfer in the Asian revolution: Mao Zedong and the Asian Cominform”, *Cold War History* 14(2).